세미나자료 2024-13

2024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 R&D 발전 방안

일시 2024. 12. 13.금 14:30~17:00

장소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온라인중계)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안상훈, 육아정책연구소

국회의원 안상훈

육아정책연구소

2024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PROGRAM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요

| 제　　목 | 2024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 R&D 발전 방안

| 주　　관 | 육아정책연구소

| 주　　최 | 국회의원 안상훈, 육아정책연구소

세부일정

| 일　　시 | 2024년 12월 13일(금) 14:30~17:00

| 장　　소 |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온라인중계)

·사회: 박은정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정책연구팀장)

시간	세부일정	
14:10~14:30	등록	
14:30~14:4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개회사 **안상훈** 국회의원(국민의 힘) 환영사 **황옥경** 소장(육아정책연구소) 축　사 **조정훈** 국회의원(국민의 힘, 교육위원회 간사) 　　**나성웅** 원장(한국보육진흥원) *사진촬영	
14:40~15:30	주제발표	
	총괄소개	육아정책 R&D 허브, 육아정책연구소의 유보통합 연구 추진 현황 발표: **최은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주제발표 1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적용 관련 연구 발표: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실장)
	주제발표 2	영·유아 교원 양성 및 자격체계 연구 경향 발표: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장)
	주제발표 3	2024년 유보통합 시범사업 (『(가칭) 영유아학교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 발표: **김은설**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 시범사업 중앙지원센터)
	주제발표 4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유보통합의 실질적 의미 발표: **최효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학부모정책연구팀장)
15:30~15:50	휴식	
15:50~16:40	종합토론	
	좌장	**정선아**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토론	- **홍근석**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정현** 교수(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 **이마리아** 어머니(4세, 8세 자녀) - **최한울** 학생(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 - **정예빈** 학생(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 **김지예** 기자(서울신문)
16:40~17: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2024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CONTESNTS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개회사 ····· 1
안상훈 국회의원(국민의 힘)

■ 환영사 ····· 2
황옥경 소장((육아정책연구소)

■ 축 사 ····· 3
조정훈 국회의원(국민의 힘, 교육위원회 간사)
나성웅 원장(한국보육진흥원)

총괄소개

■ 육아정책 R&D 허브, 육아정책연구소의 유보통합 연구 추진 현황 ····· 5
• **최은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주제발표

1.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적용 관련 연구 ····· 15
•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실장)

2. 영·유아 교원 양성 및 자격체계 연구 경향 ····· 25
•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장)

3. 2024년 유보통합 시범사업 (『(가칭) 영유아학교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 ····· 33
• **김은설**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 시범사업 중앙지원센터)

4.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유보통합의 실질적 의미 ····· 43
• **최효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학부모정책연구팀장)

2024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CONTESNTS

토 론

1. 홍 근 석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 59

2. 김 정 현 교수(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 67

3. 이마리아 어머니(4세, 8세 자녀) ····· 71

4. 최 한 울 학생(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 ····· 75

5. 정 예 빈 학생(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 79

6. 김 지 예 기자(서울신문) ····· 83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 R&D 발전 방안」 정책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을 모아 이번 심포지움을 함께 주최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육아정책연구소가 그간 수행해 온 다양한 유보통합 연구들을 개관하고, 정책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각계각층의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정책적 변화에 맞추어, 보육과 유아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 차원의 관리체계 일원화는 유보통합을 위한 첫 단추일 뿐,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완성까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영유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보육·교육 환경의 개선, 질 높은 보육·교육 과정의 개발 및 적용, 적정 보육·유아교육 비용의 산출과 학부모 부담 완화, 효율적인 행정·재정 체계의 구축 등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의 모든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양한 현안에 관해 근거 기반의 정책을 설계·집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정책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그간의 관련 정책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각층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허심탄회하게 듣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향후 필요한 연구 주제를 발견하고 정책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발판 삼아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 역시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과 정책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안 상 훈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입니다.

최선의 유보통합 방안을 이끌어내고자 오늘 심포지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해주시고 개회사로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안상훈 의원님과 축사로 함께해주신 교육위원회의 조정훈 의원님,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유보통합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보통합의 핵심 연구를 오랜 시간 수행해 온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의 주요 연구 중 일부를 발표하고, 향후 연구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들이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평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사 양성, 행·재정 체계, 시설 설비 등 다방면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 육아정책연구소는 오늘과 같이 학계, 현장,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앞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계속 수행해나가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발표를 맡아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최은영 본부장님, 김은영 박사님, 강은진 박사님, 김은설 박사님, 최효미 박사님과 고견을 나눠주시기 위해 토론자로 자리해주신 김정현 교수님, 홍근석 박사님, 이마리아 어머님, 최한울 학생, 정예빈 학생, 김지예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좌장을 맡아주신 숙명여대 정선아 교수님, 사회를 맡으신 박은정 박사님과 이번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모든 실무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입니다.

육아정책 심포지엄의 의미 있는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안상훈 의원님과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님,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로 고민했던 부모님들, 아이들의 잠재력을 믿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온 모든 분의 염원이 이 자리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단 신설, 영유아정책국 출범,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의 세심한 연구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고민의 결과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그 고민의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모아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행복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임을 늘 명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조 정 훈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나성웅입니다.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 R&D 발전 방안」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애써주신 안상훈 의원실과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와 함께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보육에 대한 공동의 관심, 디지털 시대의 전환 등으로 인해 아이들의 미래는 새로운 변화와 불확실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영유아의 발달 격차를 줄이고,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연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유보통합 논의와 연구는 그동안 많은 진전을 이루어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야 할 것이나, 변화하는 환경과 정책 속에서도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영유아에게 균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기관의 질 제고와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빠르고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탄탄한 연구와 실증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중심의 정책과 연구들이 정부, 학계, 그리고 현장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유보통합 R&D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통합 교원 자격 및 양성 체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경제적 관점 등의 중요한 내용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수요자 연구부터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 통합기관을 위한 입학 기준 마련 의견수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정책 연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증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은 연속적이고 포괄적입니다. 향후 통합기관에서 성장할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함께할 교사들 또한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미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R&D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보육진흥원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장 나 성 웅

총괄소개

육아정책 R&D 허브, 육아정책연구소의 유보통합 연구 추진 현황

최 은 영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육아정책 R&D 허브, 육아정책연구소의 유보통합 연구 추진 현황

2024.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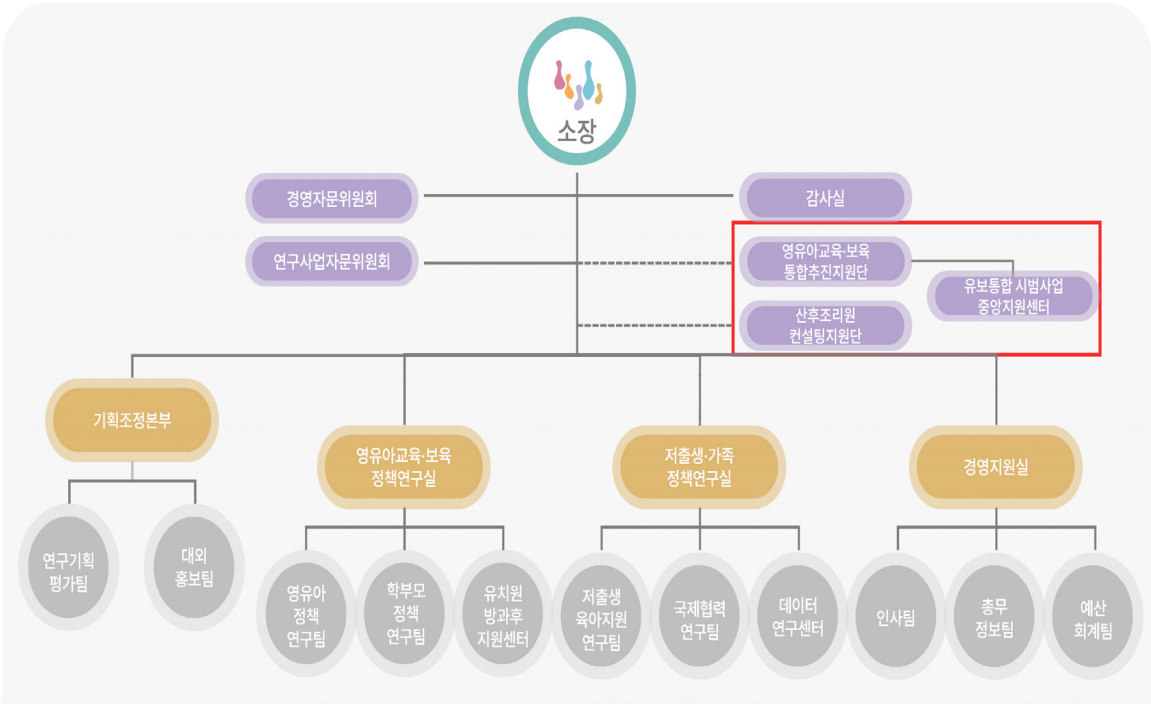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 소개 1. 기관의 설립 배경

육아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 목적

-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연구 등 육아정책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됨.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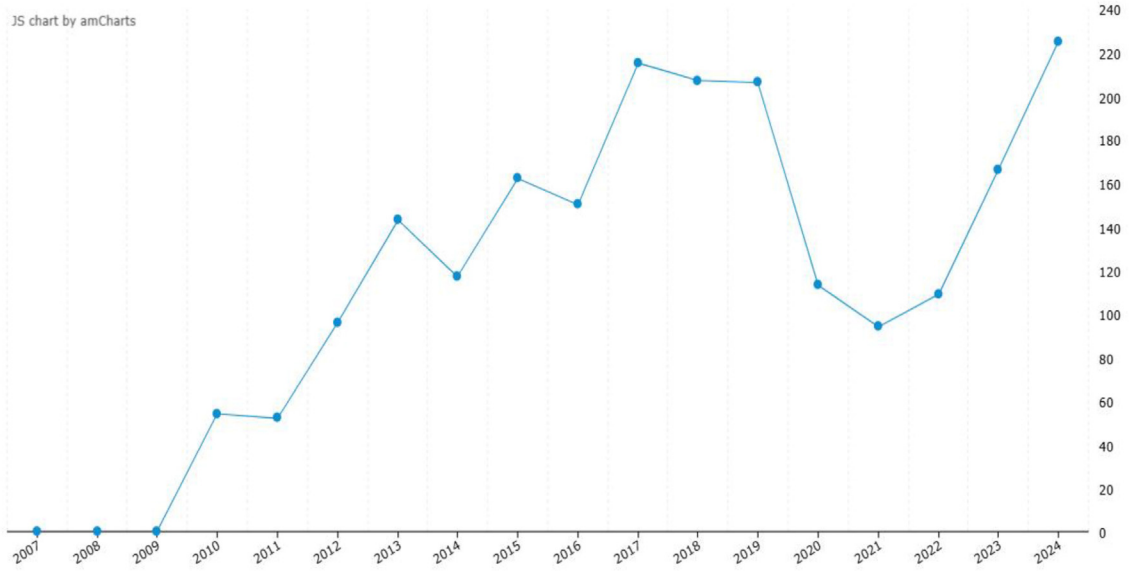
I. 소개 2. 조직 (2024년 12월 현재)



I. 소개 3. 육아정책연구소 연관 키워드 (2007~2024.11)

I. 소개

4. 육아정책연구소 키워드 트렌드 (2007~202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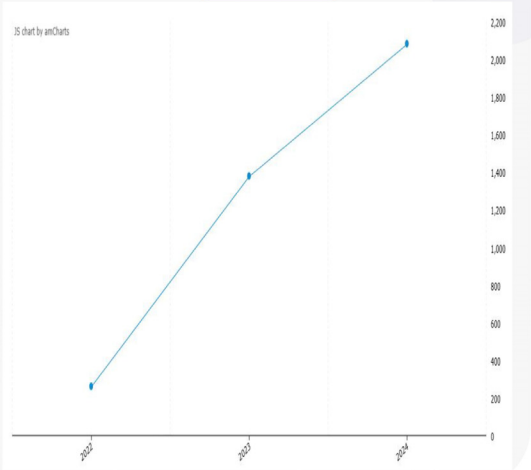


I. 소개

5. 유보통합 관련 키워드 (2022.5~2024.11)

연관 키워드

키워드 트렌드



II. 연구 사업 1. 주요 연구 영역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 연구
-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기반 구축 및 실행지원, 기관 운영, 교사/인력, 교육/보육프로그램
- ('24) 도시 및 농어촌 등 특수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 설립 개선 방안,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등

저출생 및 가족지원 연구
- 방과후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24)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 방안 연구,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등

영유아 발달 종단 데이터 축적 연구
- ('24) 한국아동패널,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 연구, 코로나 세대 아동의 발달 추적 연구

국제협력 연구
-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국제개발협력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등
- ('24) 유아 인지 사회 정서 국제조사 2주기 수행을 위한 기초 연구

II. 연구 수행 1-1.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도	구분	과제명
2024	기본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24	기본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2024	일반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 (I~III)(2022~2024)
2024	일반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I)(2023-2024)
2024	수탁	보육실태조사(2009, 2012, 2015, 2018, 2021, 2024)
2023	기본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고용 추이 및 처우개선 방안
2023	일반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I~II)(2022-2023)
2023	일반	미래환경대응 유치원·어린이집 조성방안 연구(I~II)(2022-2023)
2022	기본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행정 조직과 기능 개선 방안
2022	기본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2	수탁	유아교육실태조사(2017, 2022)
2022	수탁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수립방안 연구
2022	수탁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II. 연구 수행 1-2.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기반 구축 및 실행 지원

연도	구분	과제명
2024	일반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I~II)(2023-2024)
2024	수시	영유아 교원 양성학과 운영 개선 방안
2024	수시	유보통합 기관 설립 및 지방단위 보육사무 업무 인관 기준 마련
2024	수시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어린이집 승급연수 체계 마련 연구
2024	수탁	0-2세 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
2024	수탁	경기도 유보통합 기준비용 산출 연구
2024	수탁	유보통합을 전제로 한 서울형 통합 재정지원 모델 연구
2024	수탁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 준비를 위한 사전 연구
2024	수탁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지원 연구
2024	수탁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운영 세부 기준마련 정책 연구
2023	수시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
2023	수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지방 단위 업무 분석
2023	수시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2023	수시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비용지원 중심으로
2023	수탁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 모델 기준 마련 연구
2023	수탁	유보통합을 위한 통합교육과정 마련의 필요성과 개편 방안 연구
2023	수탁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보육·유치원 교원 자격 양성체제 개편 방안 연구
2022	수시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II. 연구 수행 2. 유보통합 연구

- 2024년 유보통합 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
-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지방 단위 업무 분석
-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 모델 기준 마련 연구
- etc

II. 연구 수행 3. 연구수행 절차

Plan 연구기획
- R&R 기반 연구기획
-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기반 연구수요/미래의제 발굴
- 부처/원내외 의견 수렴

Do 과제/과업 수행
- 연구자문위원회 및 정책검토위원회(대외), 협동연구 성과보고회
- 정책수요자 참여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 「지식공유 멘토링」 운영으로 당면 현안 공유 협력

Check 수행 점검
-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평가
- 연구윤리 자체점검단 운영

Action 성과 확산
- 영상보고서, 이슈페이퍼 등 발간물 관리
- 심포지엄/포럼 개최
- 차년도 과제 발굴/수행과 연계

연구수행 과정 및 원내 구성원 간 협력·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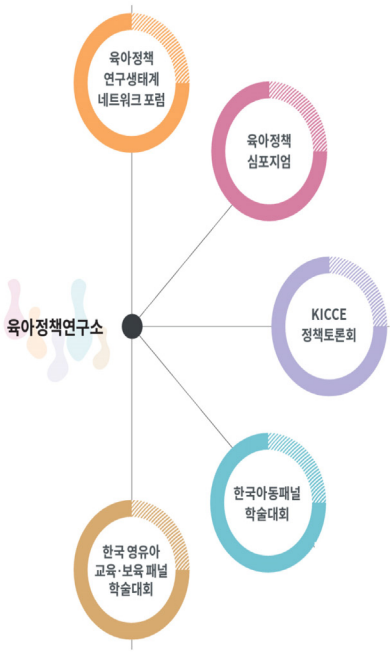
11

III. 성과 확산 4. 연구결과의 활용

정책대안을 통한 제도 개선 및 정책화

- 누리과정 개발, 누리과정 개정안, 교사용 지도서, 프로그램 개발
-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등 수립
- 어린이집 평가체계 및 개편안 마련, 유치원 평가체계 및 개편안 마련
- 보육교사 양성과정, 자격 체계(안) 마련
- 유보통합 이행단계별 실질적/법적 기반, 개편안 제시 및 반영
-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보수교육과정(안) 마련
- 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및 후속대책 마련에 반영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주권) 제도 확대,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지원 확대
- 유아학비 지원 계획(안) 마련
-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개선

III. 성과 확산 5. 주요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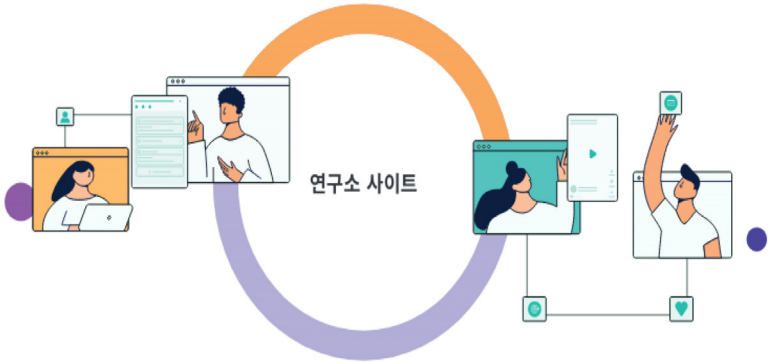


- 연구보고서
- 육아정책연구
-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 육아정책 Brief
- KICCE Policy Brief
- Issue paper
- 해외육아정책리포트
- 육아정책포럼
- 영유아 주요 통계
- 연차보고서
- 카드뉴스
- 영상보고서
- KICCE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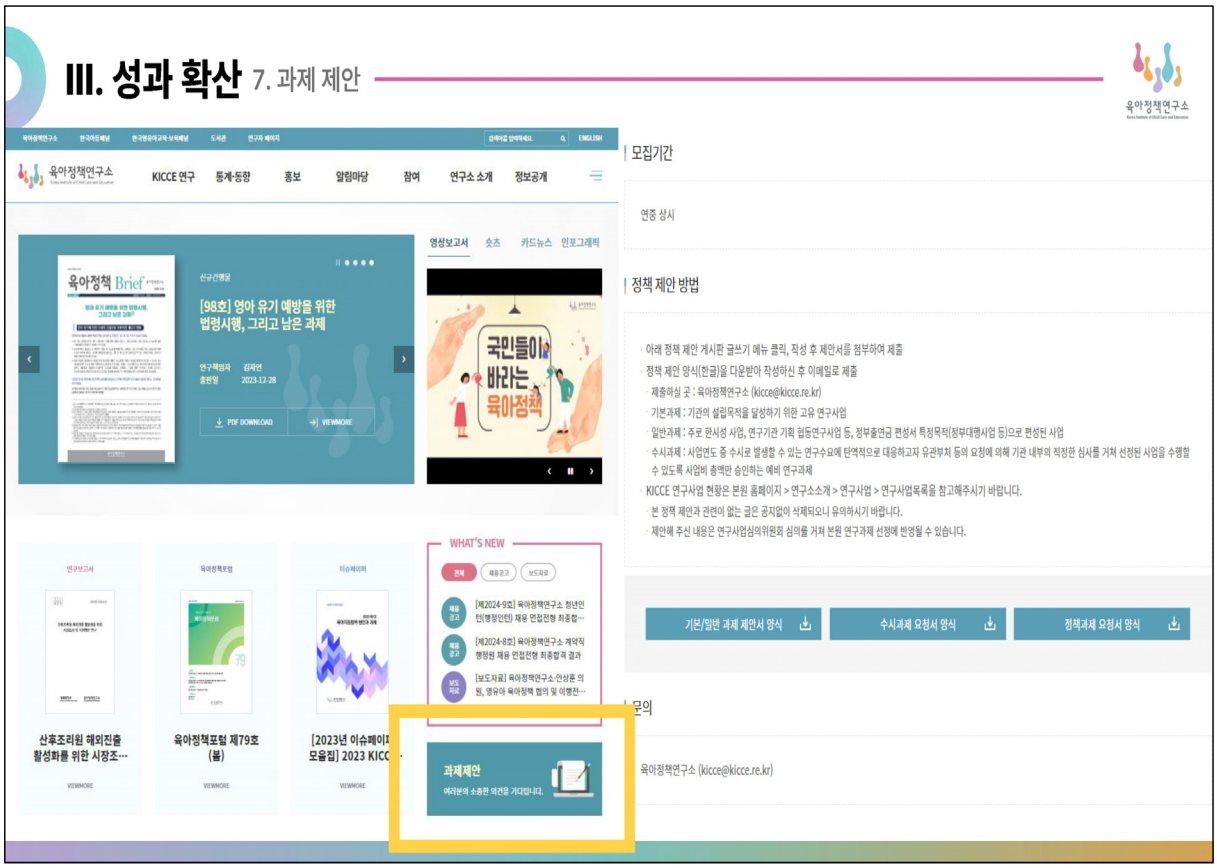
III. 성과 확산 6.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kicce.re.kr
유튜브 | https://url.kr/kicce
트위터 | https://twitter.com/KICCE2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ICCE2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kicce.re.kr/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icce1st
네이버TV | https://tv.naver.com/kicce

* SNS에서는 연구소의 소식, 육아정책동향 등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아동패널/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 홈페이지 | https://panel.kicce.re.kr/


III. 성과 확산 7. 과제 제안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연구
통계·동향
홍보
알림마당
참여
연구소 소개
정보공개
[98호]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령시행, 그리고 남은 과제
PDF DOWNLOAD
VIEWMORE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정책
WHAT'S NEW
과제제안
모집기간
연중 상시
정책 제안 방법
· 아래 정책 제안 게시판 글쓰기 메뉴 클릭, 작성 후 제안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정책 제안 양식(한글)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제출
· 제출하실 곳 : 육아정책연구소 (kicce@kicce.re.kr)
· 기본과제 :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일반과제 :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수시과제 :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
· KICCE 연구사업 현황은 본원 홈페이지 > 연구소소개 > 연구사업 > 연구사업목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정책 제안과 관련이 없는 글은 공지없이 삭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해 주신 내용은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원 연구과제 선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본/일반 과제 제안서 양식
수시과제 요청서 양식
정책과제 요청서 양식
문의
육아정책연구소 (kicce@kicce.re.kr)

감사합니다.

2024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 R&D 발전 방안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주제발표 1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적용 관련 연구

김 은 영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실장)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적용 관련 연구

발표일 | 2024.12.13

발표자 |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적용 관련 연구

CONTENTS

01 연구 추진의 배경

02 영유아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03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정책 연구

04 현장지원자료 개발 및 연수 사업

05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유보통합 10대 정책(안)

비전 실현 10대 정책(안)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0세부터** 교육·보육 책임
- 영유아의 특성과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보장" **0~5세 교육과정 통합**,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안전 기반 강화, 놀이시설 개선 등
-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급간식** 제공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보육의 질 제고: 양성 교육과정 개편, 현직교사 역량 강화 지원 등
- 영유아 교육·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 수급 관리 체계화 및 **입학·입소의 편의성 제고**: 데이터 기반 지역별 수급 관리 계획 마련 및 입소 대기 해소,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걱정 완화: 단계적 **학부모 부담 경감** 추진
- 통합 모델 내 기관 운영의 **다양성·자율성 확보**,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지원 확대

출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2023. 7. 28).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안). P. 3~4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중 영유아교육과정 개발·적용

○ **(원칙)** 영유아의 교육적 성장과 배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과정 간 연계성·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 (現어린이집) 복지부 고시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 (現유치원) 교육부 고시 「유치원교육과정」

-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내 연령 구분은 기존체계(0~1세, 2세, 3~5세) 유지
- 교육과정 총론, 체계 등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의 일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체계 통일성 강화

참 고 0~5세 영유아교육과정 개편 방안(안)

- (신설)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 신설
  특수교육 대상 및 이주배경 영유아 등 '모든 영유아를 위한 교육지원 제공' 신설
- (강화) 영아-유아, 초등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
  2022 개정교육과정 요소와 미래역량 등 새로운 수요 반영

○ **(0~2세)** 법 개정 전이라도 놀이를 통한 배움 공백 해소 및 3~5세 누리과정 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 및 시행('25.~)

참 고 교육과정 개정 일정(안)

'24.	'25.	'26. ~'27.
표준보육과정 개정(교육부)	개정 표준보육과정 시행(교육부)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및 시행(국교위)
	관련 법령* 제개정(국교위) *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교육부)

※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전 : 현 표준보육과정에 0-2세 교육적 요소를 반영하여 부분 개정 후 시행

출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2024. 6. 27)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P. 21

영유아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영유아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도출하는 기초연구 수행, **유아·놀이 중심의 철학 유지, 체계 및 내용 보완의 방향 제안**

◆ 과업명

- 유보통합을 위한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의 통합교육과정 마련의 필요성과 개편방향 연구

◆ 과업목적

-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 질제고를 통한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을 위해 유보통합에 따른 0~5세 통합교육과정 제정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연구결과

-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 철학을 견지하면서 체계와 내용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0~5세 교육과정 제정 제안

출처: 교육부(2023. 5.) 제안요청서: 유보통합을 위한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의 통합교육과정 마련의 필요성과 개편방향 연구. P. 1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2024. 9. 26, 27).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및 표준보유과정(0~2세) 부분 개정(안).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공청회 자료. P. 3

보육·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유아 중심, 놀이 중심 보육·교육과정은 성과가 많은 이면에 **학부모의 이해, 교원 전문성 제고, 교육 여건 개선 노력 필요**

-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 유아의 미래역량 제고(주도성, 창의성, 문제해결력 향상 및 행복 증진), 교사의 자발적인 전문성 제고 노력, 유치원과 어린이집 조직문화의 변화(수직에서 수평적으로 변화), 협력적인 관계로 적극적인 소통(김은영 외, 2022)
-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행의 어려움**: 영아중심의 경계와 그 모호성, 교사와 부모 간 "놀이중심" 에 대한 해석의 간극(박경민, 2022).
-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유아의 주도권 강화가 핵심, 책무성과 전문성이 더 필요(김은영 외, 2020)
-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학부모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불신, 인력 지원 및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 교원 역량 제고 필요(김은영 외, 2021)

출처: 김은영(2023). 현행 보육·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해 바라본 개편 필요성과 방향.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보육과정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시 방향 모색을 위한 1차 정책포럼. P. 6

보육·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향후 보육·교육과정 개편은 최근 사회변화를 고려한 미래 역량, 유아의 삶, 2022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고려

-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과제**: 부모의 유아 및 놀이에 대한 이해 제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여건 개선, 교사 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차이 극복(김은영 외, 2022)
- **누리과정 개정의 방향**: 유아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 반영(인성 강조, 디지털 역량 추가), 특별한 요구를 지닌 유아에 대한 배려 보강,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 강화 등(김은영 외, 2022)
-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 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교육부, 2022)
- 초등 저학년의 경우 발달적 특성과 학습 준비도를 고려하여 놀이기반 학습을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실외놀이 및 신체활동을 충분히 운영하도록 제안(교육부, 2022)

출처: 김은영(2023). 현행 보육·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해 바라본 개편 필요성과 방향.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보육과정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시 방향 모색을 위한 1차 정책포럼. P. 6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공청회 보도자료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표준보육과정(0~2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은 유아의 주도성과 놀이를 강조하고,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철학을 반영하여 영아가 즐겁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됨
-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고시하고 2025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또한, 개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 해설서 및 현장지원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과정 연수 등을 실시할 예정임.
-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으로 영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 9. 24.)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표준보육과정(0~2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9월 26일~27일,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의견 수렴. P. 1~2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정책연구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정책 연구에 기초한 개정 방향

연령 체계 유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계는 기존대로 0~1세와 2세로 구분 유지

영역 조정

2019 개정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하여 기본생활, 신체운동 영역을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통합하여 총 5개 영역으로 조정

영역별 목표 통합

교육과정 대강화 추세와 표준보육과정 목표에서 0~2세 목표가 통합하여 제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영역별 목표는 0~1세와 2세를 통합하여 제시

내용 수정 최소화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부분은 교사가 실행하기 쉽도록 포괄적으로 기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용 수정 최소화

출처: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2024. 9. 26, 27).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및 표준보유과정(0~2세) 부분 개정(안).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공청회 발표자료. P. 9

육아정책연구소

9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현장지원자료 개발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후속사업으로 해설서, 실행자료(0~1세, 2세), 모든 영아를 위한 자료 개발 및 연수

해설서

- 0~1세 실행자료
- 2세 실행자료
- 모든 영아를 위한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10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운영 지원 연수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후속사업으로 해설서, 실행자료(0~1세, 2세), 모든 영아를 위한 자료 개발 및 연수

0-2세 교육과정 연수지원단

0-2세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개정 0-2세 교육과정 자료 개발 및 강사 요원단

개정 0-2세 교육과정 집단별 연수				
장학관연수	장학사연수	육아종 관계자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원격연수
35명	335명	300명	32,000명	모든 교원
1박2일	8시간	8시간	8시간	15시간
12월	12월	12월	1월	2월

개정 0-2세 교육과정 컨설팅단 및 강사요원 양성 연수	
강사요원(교수)	컨설팅지원단 (현장교원)
400명	200명
8시간	1박2일(14시간)
12월	12월

향후 과제

- 관련법 제정
- 0~5세 교육 과정 개발
- 현장지원 자료 개발
- 0~5세 교사 전문성 지원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4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 R&D 발전 방안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주제발표 2

영·유아 교원 양성 및 자격체계 연구 경향

강 은 진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장)

2024. 10. 17. 10:00

영·유아 교원
양성 및 자격체계 연구 경향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2024. 11. 12.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 개편 권역별 토론회 자료집의 내용을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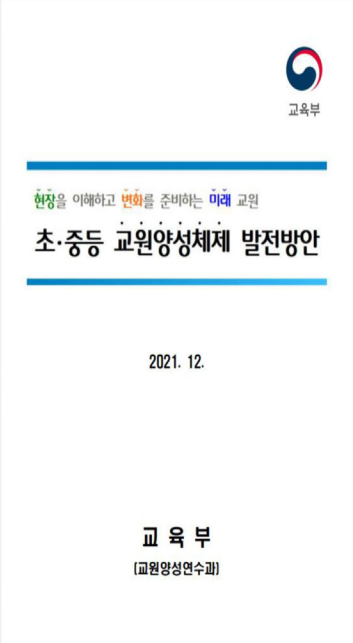
목 차

01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와 유보통합 실행계획

02 영유아교사 자격·양성에 대한 논의 방향

03 영유아교사 자격·양성에 대한 쟁점

01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와 유보통합 실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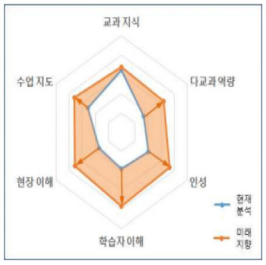


□ 추진 방향

학교·교실 현장에 대한 이해 제고	전문성 확장, 지속적 발전하는 교원
▸ **교육 실습** 강화 ▸ **현장 참여 교육과정** 운영 ▸ **학습자** 이해, **적·인성** 검증 강화 ▸ **교육청** 연계·협력 확대	▸ **다(多)교과** 역량 함양 ▸ **석사수준 재교육**(1급 정교사 연수 연계) ▸ **교대-종합대학** 연계·교류 활성화 - **교육과정 다양성** 확대 - 예비교원 **교육과정 선택권** 강화
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예비교원·대학 등 현장 수용성**
▸ 초등 **수급계획** 고려, 정원 조정·관리 ▸ 중등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 사범대 : 공통과목 등 중심 - 교직과정 : 전문교과, 신규분야, 비교과 등 - 교육대학원 : 재교육 기능 강화	▸ 예비교원 **기회비용** 고려 ▸ 교원양성기관 **목적형** 양성 중심 ▸ 대학 개편의 **비용/효과** 고려

Ⅱ-1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 개선

< 교원양성 교육과정 지향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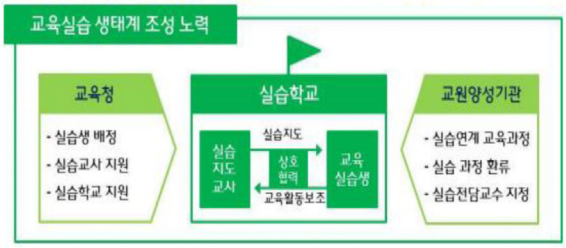
❖ **미래 소양** 함양
- 원격교육, AI·빅데이터 등 **정보기술 활용** 역량
- 기후·환경, 포용사회, 인권 등 **사회 변화에 대한 감수성**

❖ **현장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 **현장 교사** 강의 참여 및 교수자 현장 이해 제고
- **학습자 이해** 제고 및 **초·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 **다층적 적·인성 검증** 체계 구축

❖ **교육과정 편성·지도·평가** 등 **학기 전 과정 실습 참여(실습학기제)**

❖ 교육실습생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미래소양 함양: 정보기술 활용 역량 (원격교육, AI 빅데이터), 사회변화에 대한 감수성 (기후환경, 포용사회, 인권 등)
- 교육실습 내실화
- 실습학기제 도입
- 1급 정교사 연수 연계 다교과 역량 함양

< 다교과 역량 구성 요소 >

❖ 학부 과정 + 직무 연수(학점 인정), + 1정 연수(교육대학원) 연계하여 **'융합전공'** 이수
- (중등교원) 현행 '부전공' 제도를 **'다교과전공'**으로 명칭 변경·개선(교과별 특성 고려)
- (초등교원) 현행 학부 '심화과정'을 **'핵심전공'**으로 신설·개편(현장 수요 대응)

유보통합 실행계획 (2024. 6)

2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양성체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 제고를 위해 자격·양성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합니다.

(통합교원 자격·양성 개편 주요 방향)

통합자격	· [1안]영유아정교사(0~5세) · [2안]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
승급체계	· '2급 →1급 →원감→원장'으로 개편
통합교사 양성	· 학사학위(전공심화 포함) 과정, 대면 중심의 학과 또는
현직교사 통합자격 취득	·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통합자격 취득과정 운영

※ 통합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 **(통합자격)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검토** 후 결정

- ❶현장교사, 학부모, 학계·단체, 양성대학의 **의견** 및 ❷0~5세 영유아 **교육과정**, ❸**통합기관 기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 검토 후 결정**

현행		개편(안)	
보육교사	0~5세 보육	1안	0~5세 담당 영유아 정교사
유치원교사	3~5세 교육	2안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 **(승급체계)** 영유아 정교사 **승급** 경로는 **'2급→1급→원감→원장'**으로 개편

(계획) 2027년 신규교사 입학, 2031년 첫 신규교사 배출

○ **(통합교원 양성)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학사** 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전공제**(가칭 영유아교육전공)로 **신규교사** 양성

※ 자유전공제, 마이크로디그리, 실습학기제 도입 등을 통해 영유아 교사 양성과정 혁신

현행		개편(안)	
보육교사	전문대학, 4년제,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 등 * 보육교사 3급 양성은 폐지 예정	영유아 교원	(학위) 학사학위 이상① (양성방식)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학과개편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② ※ 비대면학점제가 만은 승급가 만으로 운영 검토
유치원교사	전문대학, 4년제,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① 전문대학에서도 **영유아교사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50조의3) **개정**

②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 관련학과는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을 원칙, 비사범 학과는 명칭 변경 없이 **'영유아교육 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양성정원은 별도 심사

02 영유아교사 자격·양성에 대한 방향

계열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자격 일원화

1. 유아교사 자격의 계열성

유치원 정교사 자격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유치 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서 제시

〈표 1〉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교사의 자격종별과 최소 이수기준

자격종별	전공 세부 이수기준	교직 세부 이수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초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중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중등)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5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준교사	5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실기교사	50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출처: 교육부(2021a)

2. 보육교사 자격의 특수성

보건복지부 산하 준공영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자격관리

영유아교사 자격은 0-5세로 일원화
전공이수과목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기준 참조

계열성: 최소학력 초중등에 맞게 4년제 학과 방향
특수성: 표시과목에 맞게 학과운영지침 제시 가능. 그러나 교원양성기관평가 받지 않는다면 교육부 관리에서 벗어날 것

김대욱 (2023). 유보통합을 위한 0-5세 영유아교사 자격과 영유아교육과 중심 양성체제, 그리고 기존 교원의 영유아교사 자격 부여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28(3), 1-27

영유아교사 양성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방안 (고영미 외, 2024 진행중)

- 통합자격 기준: 아동 이익 최우선, 교육제공 형평성, 교사 전문성 및 전문화
- 통합자격: 0-5세 교사, 발달적 연계성 고려
- 양성 전공교육과정: 영유아교사 핵심역량 반영- 자기관리역량, 교육과정 이해 및 실천역량, 학습자 이해 및 지원역량, 관계 역량,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 등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교과교육론, 교과논리 및 논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포함
  - 단,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고려한 교과목 구성과 내용 조정
  - 현행유지: 영유아+교과목명, 통합교육의 실제, 영유아교수학습방법 1,2로 개발

/ 교직과목 22학점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현직 교사 통합교사 자격 과정(안) (고영미 외, 2024 진행중)

- 복수자격 소지자: 통합교사자격 신청 후 자격취득
- 단수자격 소지자 중: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 선택
  - 유치원교사 1급, 보육교사 1급 현직교사 - 통합교사자격 비학위과정 취득 대상
- 1안) 보육교사자격소지자: 교직과목(22학점)+ 전공교과교육영역(8학점)
  유치원교사자격소지자: 영아관련과목 이수(9학점)+ 실습(3학점)
  2안) 보육교사자격소지자: 교직과목(22학점)
  유치원교사자격소지자: 영아관련과목 이수(9학점)+ 실습(3학점)
- 논의사항: 통합교사양성과정 비학위과정 운영 기관선정 기준, 일병행 가능하기 위한 대체교사지원, 통합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수 확충 등

영유아교사 수업 연한 (김은설 외, 2023)

- 4년제 대학 교사양성학과 (학부모 선호 77.1%)
- 전문대학 영유아교육학과는 4년제로 상향(고등교육법 간호학과 모델 적용, 전공심화전공운영, 교직과목 공동운영)
- 대면중심 교육 강화: 전면 대면 또는 비대면교육 일부?

영유아교사 양성학과 사전승인을 통한 수급 관리

- 첫째,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6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 역량진단 결과의 확정 일정보다 신규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입학 정원 확정 일정이 앞서야 하는 상황
- 둘째, 영유아교사의 수급을 고려할 때, 6주기 평가 대상과 신규 영유아교육(학)과 진입학과의 정원인정을 현 10% 비율에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유형 1]

5주기 평가 실시 학과: 사범대 유아교육학과, 일반대 유아교육학과 [교육과정 변경]

→

[유형 1]

6주기 평가 실시 후, 결과 등급(A~E)은 부여받으나, C~E 등급에 대한 감원 조치 대상 제외

[유형 2]

신규 진입 신청 학과: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 운영 아동관련 학과 중 학과통폐합 및 전환을 통해 영유아교사 양성을 희망하는 학과

→

[유형 2] 유형 1과 유형 2 모두, 영유아교육학과(유아교육과 포함) 전체 통합의 과정 중이므로, 6주기 평가대상에서 일괄 제외. 단, 6주기 평가지표를 활용한 사전승인 기준 제시

03 영유아교사 자격·양성에 대한 쟁점

- 영유아 교원에 대한 역량에 대한 장기적 플랜 필요
- 교원의 전문성 상향평준화에 따른 처우개선 동반
- 교육부의 실행계획을 위한 추진 방향과 구체적 실행계획 발표와 후속 사업 필요
- 영유아 특수교사 자격 취득과 양성 논의 필요

주제발표 3

2024년 유보통합 시범사업 (『(가칭) 영유아학교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

김 은 설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 시범사업 중앙지원센터)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2024년 유보통합 시범사업(『(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

일 시 | 2024.12.13.

발 제 자 | 육아정책연구소
김 은 설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4년 유보통합 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

CONTENTS

01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_ 개요, 내용, 현황

02 "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 _개요, 사업 구조, 연구 내용 및 방법, 과제별 세부 내용, 연구 진행 현황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1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_ 개요

❖ **(목적)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24년부터 현장 구현**

- 기관 간 **교육·보육 여건 상이**하여 **개선 필요 →**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 모색**

❖ **(사업 기간)** '24.9월 ~ '25.2월

* 시범사업은 매년 성과평가 후 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최대 3년간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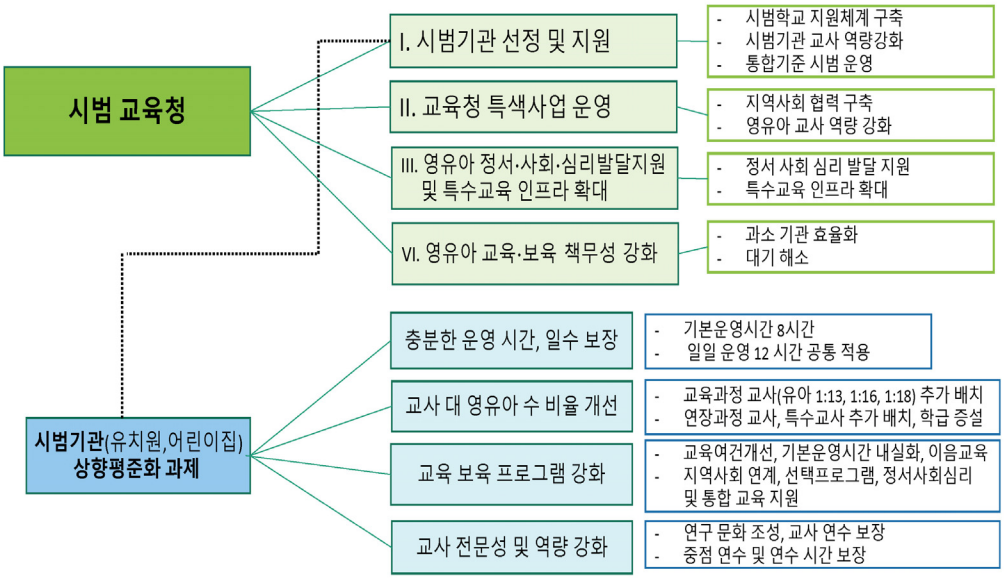
❖ **(지원 대상)** 시·도 교육청

❖ **(지원 규모) 150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17개 시도 교육청 각 6개 이상 기관)

❖ **(예산)** 특별교부금 총 262억원*(17개 교육청 × 15억원 내외)

3

01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_ 내용



4

01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_ 참여 기관 현황

설립유형별 참여 기관 수

	유치원			어린이집					
	공립	사립	계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계
계(총 150개 기관)	8.00	66.00	66.00	25.00	24.00	14.00	13.00	8.00	84.00
	11.76%	88.24%	100.00%	29.76%	28.57%	16.67%	15.48%	9.52%	100.00%

시도별 참여 기관 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	6	43	8	5	5	6	5	5	5	6	6	6	6	20	4	6	150

5

02 (육아연) 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_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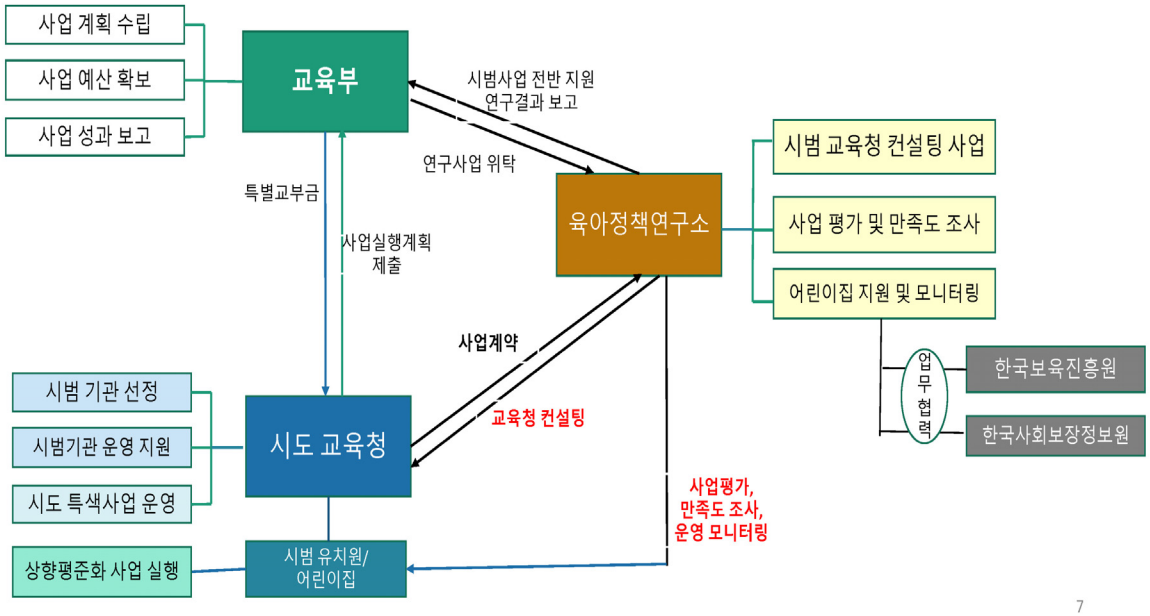
❖ **(목적) 1)** 유보통합을 위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효과적 **현장 적용과 운영을 지원**하고,
2) 교육부와 상이한 행정관리 체계 속에 있던 어린이집이 시범학교로서 원활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어린이집 간 지원의 방식을 모색하며**,
3)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시범사업 확대·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유보통합의 현실적 안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둠**.

❖ **(연구 기간)** '24.9월 ~ '25.2월 (4월까지 연장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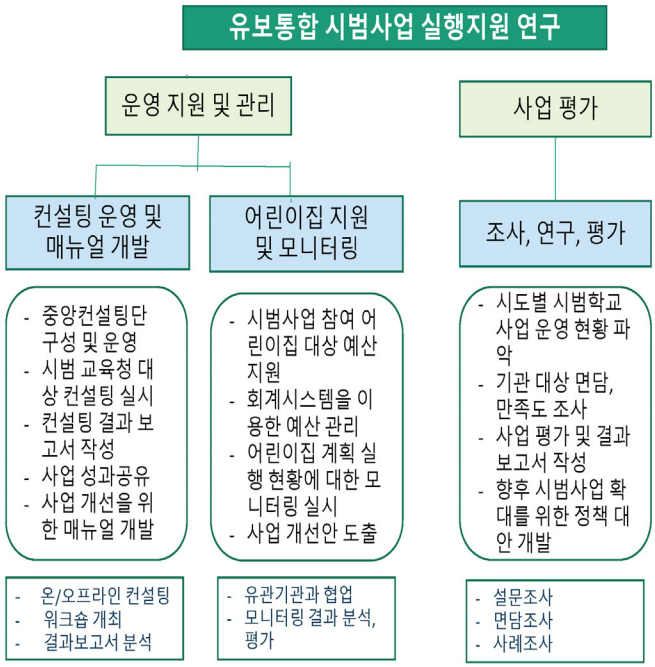
❖ **(연구 내용)**
[과제 1] 시범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및 매뉴얼 개발
[과제 2]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 평가
[과제 3] 시범기관 모니터링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6

02 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_사업 구조



02 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_ 연구 내용 및 방법



02 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_ 과제별 세부내용

❖ **[과제1] 시범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및 매뉴얼 개발**

• **중앙컨설팅단 구성**
-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분야 학계, 연구소 전문가 약 20명
- 영유아 발달 지연, 특수교육 분야 전문가 포함

◦ **주요 업무 내용**
- 시도 교육청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계획서 검토 및 컨설팅 8. 14-21
- 시도교육청 대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청 간담회' 개최 9. 5.
- **교육청 대상 지역별 현장 컨설팅 실시** (11월- 12월)
- 컨설팅 사례 작성 및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
- 차년도 **시범학교 운영 및 효과적 컨설팅을 위한 매뉴얼 제작** ('25. 1-2)
- 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25. 2)

◦ **컨설팅 방법**
- 온라인 줌 활용 + 현장 방문, 교육청 협의회
- 컨설팅 대상: 시범 교육청 사업 전체, 지역 컨설턴트 및 시도 담당자
- 컨설팅 **전문가별 집중 담당 시도교육청 배정 맞춤형 컨설팅**

9

02 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_ 과제별 세부내용

❖ **[과제1] 시범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및 매뉴얼 개발**

• **컨설팅 단계별 내용 및 일정**

- **1차(실행계획서 단계):** - (지정) 유형의 다양성 포함 여부, 지정과정의 적절성 및 애로점 파악
  8월 - (목표 달성도) 기관 현황, 지원계획의 구체성 여부
  - (예산 활용) 예산 적절성
  -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색사업 제시, 정서·사회·심리 발달 지원 포함

- **2차(적응 단계)** :- (운영 지원) 시범학교 관리, 지원 체계 운영 적절성
  10월 - 교육청 특색 사업 계획 실행의 적절성, 애로점 및 개선안 도출

- **3차(정착 단계)** : - 시범사업 실행 우수 기관 사례 수집 및 공유
  11-12월 - **교육청 방문, 지역컨설턴트면담**

- **4차(마무리 단계)** - 차년도 사업을 위한 컨설팅 매뉴얼 작성
  '25년 2월 -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10

02 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_ 과제별 세부내용

❖ **[과제2] 2024년 유보통합 시범사업 평가**

• 연구내용
- 시도별 시범사업 운영 현황 및 참여기관 특성 분석
- 시범학교의 **서비스 질 개선 개선 효과와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시범사업 운영체계 점검 및 **개선과제 도출**
- 통합모델 보완사항 도출 및 통합기관 확산 방안 제안

• 연구방법
- 설문조사: - (대상) 기관 운영자, 교사, 학부모
  - (내용) 시범 운영에 따른 개선 효과, 요구조사, 만족도 조사

- 심층면담: (대상) 원장, 교사, 학부모
  (내용) 시범학교 운영 모델 적용시 어려움, 지원 및 개선 요구 파악

11

02 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_ 과제별 세부내용

❖ **[과제3] 시범기관 모니터링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시범사업 네트워크 내 타 기관과의 협업 주도 및 총괄
- 시범기관(어린이집)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보육진흥원과 협업
- 시범시관(유치원) 모니터링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
- 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원 예결산 시스템 활용을 위한 한국사회정보원과 협력

◦ 시범사업 모니터링 지표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시범사업 운영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지표 및 가이드라인 개발
- 교육청 대상 모니터링 지표 설명회 개최

◦ 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 모니터링 (한국보육진흥원 위탁)
- 시범 어린이집의 사업계획 실행 정도 및 예산 집행 내역 점검 (현장 방문 2회)
※ 유치원에 대한 모니터링은 교육청에서 시도별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 지표에 따른 기관별 운영특성 평가시범사업 참여
- 사업운영 개선안 도출

12

02 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_진행 현황

컨설팅 및 매뉴얼 개발

(3차 컨설팅 진행 중 11-12월)_사업 개선 요구 사례
- *교육청과 어린이집 간 지원/행정 체계 구축*
- *지자체 업무 협력, 통합에 대한 이해 제고*
- *돌봄 교사의 자격, 인건비 기준 마련*
- *교사의 역량 개발, 교육 활동 준비 시간 확보*
- *심리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 방안, 사례 공유*
- *교사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기회 확대 등*

시범 사업 평가

- 시범사업 성과 평가 지표 개발
- 시범기관 성과 결과 보고 양식 배포
- 시범사업 운영 현황 및 학부모, 원장, 교사 **만족도 조사 개발, 진행**
- 심층 면담 진행(예정)

어린이집 지원 및 모니터링

- 84개 어린이집 대상 교부금 지원 (9월)
- 어린이집 회계 처리 시스템 운영 및 결산 확인
- 시범사업 계획 실천 현황 **1차 모니터링 완료(11월)**
- 2차 모니터링 예정('25년 1월)
-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결과 분석, 제공

13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4

주제발표 4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유보통합의 실질적 의미

최 효 미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학부모정책연구팀장)

2024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유보통합의 실질적 의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표일 | 2024.12.13
발표자 | 최 효 미

2024 육아정책 심포지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유보통합의 실질적 의미

CONTENTS

01 학부모 선호 및 비용 부담 완화

02 표준 보육, 교육 비용

03 재원 이관 방안 및 법령 개정

04 유보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 효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1

2024 육아정책연구소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학부모 선호 및 비용 부담 완화

1.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비용
2. 어린이집 이용자의 희망 양육형태

학부모 선호 및 비용 부담 완화

유보통합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학부모 부담 완화**임.

〈표 1〉 연도별 영유아의 어린이집, 유치원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 만원(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1차년도(2018년)	6.6 (1,163)	14.2 (630)
2차년도(2019년)	7.8 (1,235)	15.0 (617)
3차년도(2020년)	6.1 (1,139)	13.7 (551)
4차년도(2021년)	7.1 (1,196)	14.1 (682)
5차년도(2022년)	7.6 (1,233)	12.9 (678)
6차년도(2023년)	7.6 (1,212)	13.3 (655)

주: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 괄호는 해당 서비스 전체 이용자 수.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18~2023' 1~6차년도 원자료. 육아정책연구소.

○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용은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크게 변화가 없음.

○ 2023년 급격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됨.

○ 현행 무상 보육·교육 지원 체계로, 보육료 상한제와 원비 상한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

○ 단, 유치원 이용 비용은 언제나 어린이집 이용 비용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학부모 선호 및 비용 부담 완화

유보통합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학부모 부담 완화**임.

〈표 2〉 어린이집 이용이 원하는 양육형태가 아닌 경우 – 희망 양육형태

단위 : % (명)

구분	유치원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1차년도(2018년)	24.8	11.3	34.8	26.4	1.7	1.0	100.0	(199)
2차년도(2019년)	31.6	10.0	36.9	19.6	1.3	0.6	100.0	(166)
3차년도(2020년)	32.5	11.3	31.6	20.8	1.9	1.8	100.0	(109)
4차년도(2021년)	37.1	9.9	33.7	18.6	0.8	-	100.0	(112)
5차년도(2022년)	47.9	4.5	27.5	18.9	1.1	-	100.0	(78)
6차년도(2023년)	44.1	0.8	26.8	24.7	3.6	-	100.0	(101)

자료: 1)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22. 육아정책연구소.
2)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6차년도 원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5

2024 육아정책연구소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학부모 선호 및 비용 부담 완화

유보통합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학부모 부담 완화**임.

▹ 유치원 이용 비용이 어린이집 이용 비용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상당수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함.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가 아닌 경우 그 이유는
'일을 하고 있어서'가 46.9%(2023년 조사 기준)로 가장 주된 이유임.

-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2023년 기준 16.9%에 불과함.

▹ 반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는 거의 없음.

▹ 영유아 부모들은 단순히 저렴한 보육·교육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닌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게 존재함

➡ 유보통합을 통한 교육보육서비스 질의 상향평준화는 학부모의 요구와 선호에도 부합하는 방향성임.

육아정책연구소

6

02

2024 육아정책연구소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표준 보육, 교육 비용

1.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2. 표준 보육비용
3. 표준 유아교육비

표준 보육, 교육 비용

표준 보육비용과 표준 유아교육비용은 **산출 방식 등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부모가 받는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금은 동일함.
- 영유아 및 가구의 취약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단, 국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는 부모 지원금이 차이가 있으나, 국공립 유치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 부모 자부담분이 가장 적음.

〈표 3〉 어린이집 (부모)보육료 지원 금액 (2024년)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4세반 (누리과정)	5세반 (누리과정)	
적용시기	('24.1.1~)	('24.1.1~)	('24.1.1~)	('24.1.1~)	('24.1.1~)	('24.3.1~)
보육료(일반, 다문화, 야간보육)	540,000원	475,000	394,000	280,000	280,000	330,000
장애아보육료	587,000					
24시간 보육료	810,000원	712,500원	591,000원	420,000원		

〈표 4〉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금액 (2024년)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3~4세반 (누리과정)	5세반 (누리과정)		3~4세반 (누리과정)	5세반 (누리과정)	
적용시기	('24.1.1~)	('24.1.1~)	('24.3.1~)	('24.1.1~)	('24.1.1~)	('24.3.1~)
유아학비	100,000	100,000	150,000	280,000	280,000	330,000
방과후 과정비	50,000			70,000		
저소득층학비	없음			최대 2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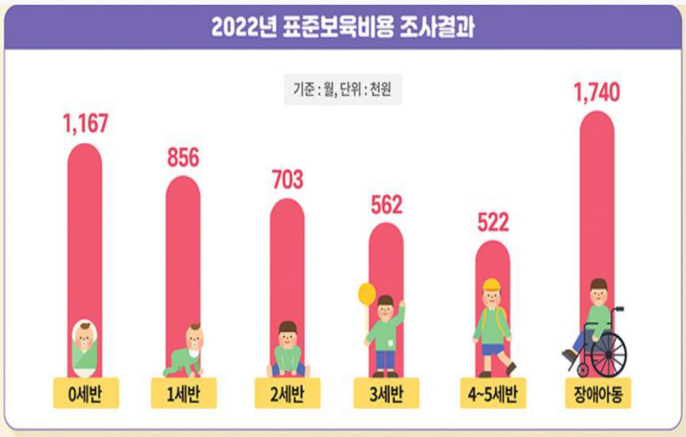
▹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특성의 차이 등으로 인해, 기관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차이가 있음.

육아정책연구소

표준 보육, 교육 비용

표준 보육비용과 표준 유아교육비용은 산출 방식 등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표 5〉 어린이집 표준 보육비용(2022)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2023. 3. 30)
근거보고서 : 김동훈 외(2022)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표준보육비용은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시설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됨.

○ 50인 규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아동수로 나눈 비용임.

○ 2022년 기준 0세반은 116만 7000원, 1세반은 85만 6000원, 2세반은 70만 3000원, 3세반은 56만 2000원, 4~5세반은 52만 2000원.

○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원임.

○ 매3년마다 산출하며, 매년 연도별 보정 (최근 3개연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2024 육아정책연구소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표준 보육, 교육 비용

표준 보육비용과 표준 유아교육비용은 산출 방식 등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표 6〉 유치원 표준원아 1인당 표준 유아교육비(2020)

단위 : 천원

		공립	사립	계
표준인건비	교원	347	275	299
	직원	19	36	30
	소계	365	310	329
표준교육활동경비		67	56	60
표준공통운영경비		116	172	153
표준유아교육비 총액		548	538	542

자료: 엄문영 외(2020). 표준유아교육비 개선방안 연구

○ 유치원의 원아 1인당 표준 유아교육비는 월평균 54만2천원임.

○ 공립 유치원의 원아 1인당 표준 유아교육비는 월평균 54만8천원임.

○ 사립 유치원의 원아 1인당 표준 유아교육비는 월평균 53만 7천원임.

○ 유아교육비 산출 방식은 표준 학급 등을 설정한 상태에서 3개의 비목으로 산출한 후, 전체 비용을 학급당 아동 수 등으로 나누어 산출.

표준 보육, 교육 비용

표준 보육비용과 표준 유아교육비용은 **산출 방식 등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표준 보육비와 표준유아교육비는 산출 방식부터, 포함되는 비목 등이 상이하여 직접적 비교가 어려움.
- 현재 공표 자료 기준으로 표준보육비와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출 연도도 2022년과 2020년으로 상이함.
- 표준 보육비가 표준 유아교육비보다 2년 후에 산출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4-5세 기준 (표준보육비) 52만2천원으로, (표준유아교육비) 54만2천원보다 낮음.

➡ 유보통합 과정에서 통합 모델에 대한 **적정 지원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산출 방식 등의 통합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 수시과제로 수행된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 비용 지원 중심으로' (양미선 외, 2023)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이 외 비용 지원에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임.

  - 방과후 과정비, 급간식비, 만0-2세 부모부담 경비(입학 준비금) 단가 등을 산출한 연구임.

육아정책연구소

11

03

2024 육아정책연구소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재정 이관 방안 및 법령 개정

1. 법령 개정 추진 현황
2. 유아교육 관련 예산
3. 보육 관련 예산
4. 표준 보육비용 대비 예산 규모

재원 이관 방안 및 법령 개정

관리체계 일원화 과정에서 재원 이관은 핵심 사항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관련성이 높음

- 유보통합 추진 초기에는 관리체계 일원화 및 관련 법령 정비가 주요 정책 과제임.
-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이라고 불리는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칭함.
- 이 중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마련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임.
- 국고 대응투자(2023년 기준 약 3조원)는 2024년말까지 법령 개정을 통해 재원 이관 추진.
  - 단, 재원 이관을 위한 경과 기간 등을 둘 것으로 보임.
  - 지자체 시책사업예산(2023년 기준 약2조원)은 성격(필수적 경비)에 따라 이관을 추진한다는 계획.
- 누리과정 지원금(유아교육특별회계)는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 법령으로, 재원 이관과 함께 재원 통합 진행 필요.

➡ (가칭) 교육 · 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한 중앙정부 재원(유특회계 + 복지부 국고지원금)의 이관 및 통합.

재원 이관 및 법령 개정

관리체계 일원화 과정에서 재원 이관은 핵심 사항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관련성이 높음

〈표 7〉 유아교육 관련 예산 총괄 (2022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유아교육진흥	유아교육운영	80,862	(1.8)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13,034	(2.5)
	유치원교육여건개선	28,521	(0.6)
	사립유치원지원	442,423	(9.6)
	계	664,840	(14.4)
누리과정지원		3,947,964	(85.6)
총계		4,612,804	(100.0)

자료: 최효미 외(2023).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 기준.

○ 유치원 관련 예산은 유아교육진흥 예산과 누리과정지원(유특회계) 구분됨.

○ 누리과정지원(유특회계)가 2022년 기준 3조9,479억6,400만원 (85.6%)임.

○ 총액 기준 4조 6,128억400만원임.

○ 국공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이 제외된 금액임.

재원 이관 및 법령 개정

관리체계 일원화 과정에서 재원 이관은 핵심 사항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관련성이 높음

〈표 8〉 보육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 (2022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국고 보조금 사업					
국고		국고 외 (지자체 매칭 + 자기부담금)		계	
5,041,775	(62.5)	3,027,878	(37.5)	8,069,653	(100.0)

자료: 최효미 외(2023).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원자료: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표 9〉 지자체 특수보육시책 예산 (2021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예산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예산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예산	
1,592,321	(100.0)	1,234,410	(77.5)	357,911	(22.5)

자료: 최효미 외(2023).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원자료: 최윤경 외(2021).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은 2022년 기준 8조696억5,300만원임.

○ 국고 예산이 5조 417억7,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의 국고 예산은 관리체계 일원화로,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자연스럽게 이관.

○ 국고 외 지자체 매칭 혹은 지자체 자기부담금이 3조 278억 7,800만원으로, 현재 지자체의 의무 매칭.

➡ 국고 대응 투자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법률 개정 추진 중)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특수보육시책 사업예산은 2021년 기준 1조5,923억2,100만원임.

➡ 필수적 경비는 이관 추진 계획.

재원 이관 및 법령 개정

관리체계 일원화 과정에서 재원 이관은 핵심 사항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관련성이 높음

〈표 10〉 보육 예산 대비 표준보육비용 적용 연간 추계액 비중

단위 : 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 예산			표준보육 비용(2022년 기준) 적용 연간 추계액	보육 예산 대비 연간 추계액 비중	국고보조금이 연간 추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고보조금 (2022년)	지자체 특수보육시책 (2021년)	전체			
8,069,653	1,592,321	9,661,974	9,600,280	(99.4)	(84.1)

자료: 최효미 외(2023).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표 11〉 차액 대비 특수보육시책 예산 비중

단위 : 백만원, %

표준보육 비용(2022년) 적용 연간 추계액	지자체 특수보육시책 (2021년)	차액 (연간추계액-국고보조금)	차액이 특수보육시책에서 차지하는 비중
9,600,280	1,592,321	1,530,627	(96.1)

자료: 최효미 외(2023).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표준 보육비용 적용 연간 추계액(2022년)이 보육예산 추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4%임.

○ 국고보조금이 표준 보육비용 연간추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임.

➡ 즉, 국고보조금 전액(지자체 국고대응투자 포함)을 이관하면, 표준 보육비용의 약 84.1%를 커버 가능.

○ 표준보육비용 적용 연간 추계액에서 국고보조금을 뺀 차액은 1조 5,306억2,700만원임.

○ 차액이 특수보육시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1%임.

➡ 지자체 표준 특수보육시책예산의 96.1% 수준의 예산이 있어야, 표준 보육비용 수준 커버 가능. (단, 지자체 특수보육시책은 지자체 자율)

04

2024 육아정책연구소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유보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

1. 유보통합의 기대 효과
2. 누리과정이 교육보육비용에 미친 영향
3. 누리과정이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

유보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 효과

유보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추진되지는 않았으며, 기대 효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함.

- 유보통합은 보육 및 교육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무엇보다 유보통합의 방향성이 상향평준화로 맞추어져 있는 만큼, 통합된 보육교육서비스 체계 안에서
  모든 영유아 가구가 균질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축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감소 등 지원 인력의 확대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이원화된 체제의 통합을 통해 행정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적정 규모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른 부가적 효과가 예상됨.

유보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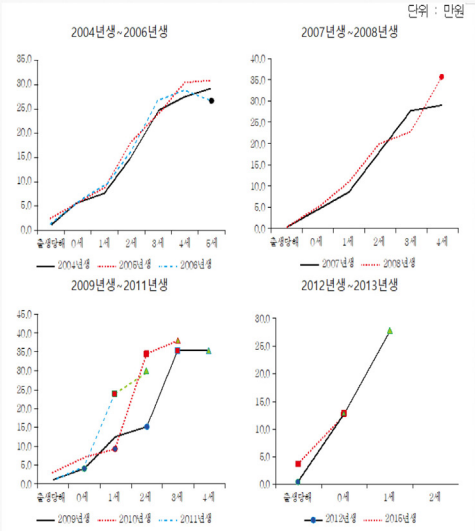
유보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추진되지는 않았으며,** 기대 효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함.

▹ 2013년 전후 유보통합 논의 초기 이뤄진 통합 교육 ·보육과정 (일명 누리과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보통합의 기대 효과를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임.

▹ 누리과정 지원 도입이 영유아의 교육보육 이용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
-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2012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비스 이용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됨.

▹ 2013년에는 비용 경감 효과는 사라짐.
- 이는 2013년 기관 이용율이 높아지면서 가계부담 완화 효과가 희석된 것으로 해석됨.



주: 그래프의 표식 중에서 동그라미는 2012년도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의 적용을 받은 경우, 네모는 2013년도, 삼각형은 2014년도의 적용대상을 의미함.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유보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 효과

유보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추진되지는 않았으며,** 기대 효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함.

▹ 최효미 외(2016)에서 수행한 비용 지원 정책(무상 보육교육)의 정책 효과 분석(분위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 무상 보육유아교육 시행 전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비용 **분위별 가구소득 탄력성 차이가 감소함.**

▹ 정부의 비용 지원 확대는 가구소득에 따른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분산 차이를 줄이는데 기여.

➡ **교육보육비용 지출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함.

➡ 즉,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 단,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지원 확대 이후 실질적인 가계부담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
- 기존의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은 완전 무상화라고 보기 어렵고,
- 가정양육을 하던 저소득 가구가 기관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일부 수익자 부담금이 발생했기 때문.

유보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 효과

유보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추진되지는 않았으며, 기대 효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함.

- 이정림 외(2014).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통합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관찰척도(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임.
- (횡단 분석 결과) 유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치원(국공립, 사립) 여부와 교수 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등의 변인이었음.
  - 단, 유치원이 아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은 5세에 국한됨.
  - 교사 및 교수 특성 중 교사의 경력은 오히려 음의 계수(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누리과정 적용 이후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발견됨.
  -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패널 1차 차분모형 분석을 실시.
-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 모든 유형에서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
  - 3-5세 모든 연령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발견됨.
- 교수 효능감, 교사-유아상호작용은 점수 변화량 증가에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가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1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종합토론

좌장: **정 선 아**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홍 근 석**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 정 현** 교수(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 **이마리아** 어머니(4세, 8세 자녀)
- **최 한 울** 학생(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
- **정 예 빈** 학생(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 **김 지 예** 기자(서울신문)

토론 1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 R&D 발전 방안 토론

홍 근 석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 R&D 발전 방안 토론

홍 근 석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논의 배경

❍ 유보통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영유아보육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수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이한 조직·인력·기능 측면에서의 통합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조직 및 기능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① 재무건전성의 향상, ② 행정 효율성의 제고, ③ 공공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 등이 있음

- 다만 조직의 통합 시 외연 조직만 합쳐진 형태로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직구성원간 업무방식의 차이, 조직응집력의 악화, 조적구성원 간 갈등 등의 문제로 인해 통합의 효과가 저감될 수 있음

❍ 현재 발표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시·도와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관련 인력 및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생각처럼 단순한 작업은 아니며, 그 안에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현재 시·도 및 시·군·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관련 예산의 이관을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영유아보육 업무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조직·인력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시·도 교육청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영유아보육 업무를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행정적 측면**

❍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행정적 측면의 1단계 유보통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와 인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2단계 이후의 유보통합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첫째, 어떻게 하면 시·도 교육청의 필요 인력 수요만큼 시·도 및 시·군·구의 전출 수요가 발생하도록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입·전출의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파견은 동의 절차가 의무는 아니지만, 기관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함

-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의 시·도 교육청 전출이 가능해지더라도, 실질적인 임용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과의 협의가 필요함

- 그리고 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군·구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을 수 있음(홈페이지상 13개 시·군·구는 어린이집 전담 인력 없음)

- 이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와 시·도 및 시·군·구의 파견 또는 전출희망자의 수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실제 교육청으로의 전출을 위해서는 현재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일반행정직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육행정직으로 직렬을 전환해야 하며, 직렬 전환 후 교육청으로 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근무여건 등이 상이하여 희망자가 많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대규모의 전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보육업무 근무 이후 순환보직을 대비하여 조직구성원 간 융합관리를 위한 조직·인사·조직문화 등에 대한 규정정비 및 교육훈련 등에 따른 행정비용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단기적으로 시·도 및 시·군·구 인력의 파견을 통해 시·도 교육청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수행할 경우 최소한의 기간 및 인력에 대해서만 파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파견수당 등 제반 소요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둘째,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간 관할구역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영유아보육 업무는 226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176개만 설치·운영되고 있음

-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일부 비수도권 시·군 지역에서도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현상은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5세 미만 인구 수와 어린이집 수 등 영유아보육 관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우 영유아보육 관련 수요의 급증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비수도권 시·군 지역의 경우 영유아보육 관련 수요는 적지만 관할구역 범위가 매우 넓으며, 이로 인해 영유아보육 서비스의 공급 효율성이 감소되고 일반 국민의 불편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셋째, 영유아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읍·면·동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영유아보육 업무 중 일부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처리가 이루어지며, 예를 들어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업무는 매우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시·도 및 시·군·구청의 인력만을 대략적으로 검토했을 때 평균 6명에서 9명 정도가 영유아보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읍·면·동 담당 인력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매우 많은 수의 인력의 이관이 필요하게 됨

- 이들 모두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현재 읍·면·동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는 유보통합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정적 측면**

❍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재정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 관련 재원을 어떻게 현재 수준으로 담보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

- 유보통합의 목적이 유아교육-보육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부모 양육부담 완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보통합 이후에도 최소한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재정지원이 필요함

❍ 첫째, 3-5세에 대한 부모 보육료의 재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지만, 2단계 이후부터는 재원의 집행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동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액을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 교육감이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3-5세에 대한 부모 보육료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배분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부모 보육료의 신청·접수가 실제로는 읍·면·동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현재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0-2세에 대한 부모 보육료 등은 현재와 유사하게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출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2단계 이후부터는 재원의 집행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그러나 영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의무가 없어지며, 영유아보육 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교육청이 담당해야 함

-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액만큼 교육청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지방비 부담액만큼 부담하도록 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2023)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만큼 법정전출금의 형태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4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와 유사하게 '영유아보육 관련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영유아보육 관련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규모의 재원을 시·도 및 시·군·구가 의무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그러나 어린이집 관련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전출금 규모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1]을 고려하면, '영유아보육 관련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규정을 강행할 경우 시·도 및 시·군·구와의 갈등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셋째, 영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될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특수보육시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해 보육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사업만으로 지역 주민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을 부담하고 있음

- 만약 유보통합으로 인해 보육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없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사업은 축소·폐지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최근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무에 지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유아보육 업무를 지원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지방의회·지역언론 등이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사례로 지적할 가능성이 있음

- 즉, 보육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교육청으로 이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보육시책사업을 추진할 경제적인 유인(incentive)은 거의 없음

1) 2021년 기준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전출금은 456억 원 규모이지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2023)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보통합 대상인 영유아보육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부담액은 3조 1,000억 원 규모이다.

- 따라서 유보통합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보육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른 측면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결론적으로 유보통합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특수보육시책사업의 재원을 강제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반대가 예상됨

- 현재와 같은 재정 지원 체계에서 유보통합 이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함

- 따라서 유보통합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토론 2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 R&D 발전 방안 토론

김 정 현
교수(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 R&D 발전 방안 토론

김 정 현 교수(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유보통합의 중요쟁점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심포지움. 교육과정, 통합교원자격과 양성체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유보통합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되었음. 제 전공이 법학이어서 오늘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하다 보니,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거나 유의미한 질문을 드리기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림

먼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함

1. 3주제인 “통합교원자격과 양성체계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현행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체계를 ‘1안 : 영유아 정교사’ 또는 ‘2안 : 영아 정교사와 유아 정교사’로 개편할 예정. 그리고 학사학위 이상을 가져야 하고, 양성방식은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가칭) 영유아교육과로 개편될 계획.

2031년에 처음 배출될 신규교사는 현재보다 까다로운 양성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음. 기존의 어린이집의 경우 워낙 다양하다 보니, 유치원 교사 수준의 역량이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들이 공존했음. 과연 어렵게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는데, 실제 업무는 괴리가 있는 현장에 갈 경우 중도에 관두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1) 그와 같은 기관에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지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2) 아울러 전문성의 상향평준화에 따른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할텐데,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기존 교사들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3) 신규교사의 지위는 교원인지 아니면 근로지인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함

2. 5주제인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유보통합의 실질적 의미”에 따르면, 유보통합 3법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잘 설명해주심.

3법 중 영유아보육법 개정 또는 폐지가 난제라고 생각함. 현재 교육부 소관법률들은 ‘헌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 등을 비롯한 각종 교육관련 법률’의 단계적 구조에 입각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통합법률이 현재의 유아교육법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면, 법체계의 변화는 없지만 영유아보육법의 규정들을 통합법률에서 어떻게 담을지의 문제가 있음. 현재의 유아교육법의 목적조항에 따라 법의 구체적 내용을 간략하게 규정할 경우 교육과 보육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기 어려워짐

반면에 영유아보육법의 규정들을 담는 과정에서 통합법률이 여타의 교육관련 법률들과 다른 별도의 위상을 갖게 될 경우 기존의 교육 관련 법률들의 체계에 변화가 생김. 영유아보육법을 유지하되, 교육기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조문들만 통합법률안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통합법률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정책방향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조항들의 효력문제가 생기는데, 구법인 영유아보육법 신법인 통합법률의 관계에 있어서 적용례, 경과조치, 특례 조항들을 둬야 하고, 세밀하게 입안을 할 필요가 있음

3. 4주제인“2024년 유보통합 시범사업(『(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는데, 명칭과는 별개로 향후 영유아학교의 법적 성격은 교육기본법상의 학교인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함

토론 3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 R&D 발전 방안 토론

이마리아
어머니(4세, 8세 자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 R&D 발전 방안 토론

이마리아 어머니(4세, 8세 자녀)

〈발표문을 읽기 전의 궁금점〉

유보통합의 목적은 무엇인지

- 아이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서 유치원에 보낼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인가.
- 유치원과 같게 한다면 왜 같게 하려는지 궁금.
- 만약 보육이 더 필요한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권 자체가 박탈된 것은 아닌지.

유보통합은 어떻게 구현되는지

- 유치원과 동일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낮잠시스템은 왜 그대로 두는지. 현재 어린이집은 낮잠 자는 시스템(보육한다는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활동으로 보여짐)을 그대로 둔다고 함.
- 유보통합 이전부터 5세나 7세까지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이라 칭하면서 예산도 누리과정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때의 누리과정과 유보통합 후 누리과정은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

〈발표1〉 유보통합 관련 연구 소개

-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함. 유보통합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함.
- 현재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이 있는지도 모르고 3세 직전 어린이집 아닌 유치원 선택 비율이 높음. 가장 큰 선택이유는 유치원은 낮잠이 없고, 방과후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점, 공간이 넓은 점을 꼽음.
- 우리 가정의 경우, 두 아이 모두 어린이집에 최대한 오래 보냈고, 보낼 계획임. 이유는 보육적 환경이 좋아서, 즉 아이에게 선생님의 손길을 더 많이 느끼도록 해주고 싶어서임.

〈발표2〉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적용 관련 연구

1.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한 경험: 첫째 아이 때는 명확하게 있었다는 느낌. 둘째 아이 때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

- 첫째 아이: 새롭게 다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세-4세 때(2021, 2022) 카세트테이프로 거미줄놀이 등 했음.
- 둘째 아이: 민간어린이집에서 현재 2세(2024)라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아이 주도가 보이지는 않음. 실 꿰기, 색칠, 오리기 등 다양한 소근육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주 4회 일 30분간 영어(주 2회), 오감, 체육활동을 진행 중인데 선택할 수 없고 일괄 진행됨.
- 학부모로서 첫째 아이 때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음. 그러나 실제로 선생님이 제시한 교구를 아이들이 어떻게 확장 발전시켰는지 알림장 등을 통해 확인하니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부분 해소됨. 이 때의 경험이 어린이집을 오래 보내고 싶다는 느낌으로 자리잡은 것 같음.

2. 표준보육과정(0-2세) 관련

- 공청회가 진행된 줄 전혀 몰랐음. 학부모가 수시로 보는 키즈노트의 배너홍보나 공청회공문을 어린이집 공지사항에 홍보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 영역별 목표 통합: 어떤 영역이 있는지 궁금하고, 아이들은 월령에 따라서 발육 차이가 큰데 0-1세와 2세의 목표를 통합하는 것이 좋을지 의구심이 듦.

〈발표3〉 영,유아 교원 양성 및 자격체계 연구 경향

- 발표내용을 자세히 듣고 알고 싶음.

〈발표4〉 유보통합 시범사업 실행 지원 연구

- 기본운영시간 8시간, 교육가정 교사 추가 배치 환영함
- 유보통합 되면 3세반부터 낮잠시간이 없어지는지. 학부모는 낮잠시간이 없어지는 것으로 어린이집이 보육에서 교육에 더 치중했다는 것을 체감할 듯함.
- 2024년 유보통합 시범사업 평가 연구의 심층 면담이 기대되고 궁금함.

〈발표5〉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유보통합의 실질적 의미

-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잠시간 없음임. 유치원의 다양한 방과후활동도 유치원 선호 이유가 되겠지만 만약 유치원에 낮잠시간이 있다면 보내지 않을 학부모가 태반일 듯.
- 비교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이 유치원 표준교육비용에 비해 낮다는 점이 인상깊었음. 유보통합을 통해 어린이집도 양질의 아동의 선택권이 보장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봄.

토론 4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 R&D 발전 방안 토론

최 한 울
학생(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 R&D 발전 방안 토론

최 한 울 학생(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유보통합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행정부의 일원화가 진행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통합기관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행지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오늘 본 토론회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영유아학교'라는 이름의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것 같고,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의 유보통합은 시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비교사로서 유보통합에 대해 많은 불안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제는 진로를 결정할 시기입니다. 현재는 교사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의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현만 된다면, 현장에 나가 직무를 볼 때 저희에게 이득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유보통합을 위하여 필요해 보이는 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유아와 학부모의 요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영유아학교'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관이 통합되었을 때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셋째로, 통합자격이 생기면 기존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용해야 할 곳이 많아지는 데, 교사의 수를 추가로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유보통합의 실행계획에 대한 통합자격으로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단일자격인 영유아정교사 자격으로 통합하는 안, 둘째는 기존과 같이 0-2세와 3-5세가 분리되는 안입니다. 어떤 형태로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단일자격으로 시행된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영유아학교를 개설하고 단일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영아반 혹은 유아반에 배정을 받는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교사가 되었을 때 현장에서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정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던 기존의 체계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영아 전문가들이, 유치원에서는 유아 전문가들이 되어 교육 방향에 혼선이 없는 최적화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학교에서는 언제든 영아반 혹은 유아반에 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오가며 교육 방향과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단일자격을 만들게 된다면 기존의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최소한 교직과목 (22학점)을 이수하거나 이에 더해 전공 교과 교육영역 (8학점)을 이수하여야 통합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일을 병행하시거나 자격취득을 원치 않는 분들께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또한, 유아교육과를 전공할 경우 전공(53학점)과 교직과목(22학점)을 합하여 최소 75학점이며,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공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교직과목 22학점, 전공 교과 교육영역 8학점을 듣는다고 전문성을 높이고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만약 2안의 계획대로 영아 정교사와 유아 정교사 두 가지 이원화 체계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관리 부처만 통합되고 실무는 통합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이라는 취지로 유보통합이 시행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용시간과 일수 보장이라는 말은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통합된 영유아학교의 시간을 기본운영시간(8시간)과 맞춤형 돌봄 시간(4시간)으로 구성하여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유아에게 중요한 것은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영아는 안정 애착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안정 애착을 형성해야 이후의 정서, 사회성 등의 안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안정 애착이 형성된 유아더라도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영유아에게 중요한데, 오랜 시간 영유아가 기관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학부모들에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유보통합 과정은 너무 급하게 도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자격, 처우 개선, 재정 확보, 운영 및 이용시간, 시설 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유보통합을 곧바로 시행되는 것에 대하여 예비교사로서 불안이 큽니다. 유보통합이 정말 필요하다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사, 유아교사 모두를 고려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5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과 향후 방향

정 예 빈
학생(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과 향후 방향

정 예 빈 학생(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보통합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된 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정예빈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아동학과 재학생이자 예비 보육교사로서, 유보통합의 의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장점은 **영유아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발달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이 별도의 법과 제도로 운영되면서, 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교육과 돌봄의 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발달에 불균형이 생길 위험이 존재합니다. 영유아는 어느 기관에 다니든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관성 있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의 균형 잡힌 발달을 돕고, 그들의 학습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적 변화에는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교사의 역할과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교사 자격 제도에 따르면,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특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재학 중인 아동학과에서는 유아교육과보다 영유아에 대한 전공과목을 더 많이 수강하고, 3년 동안 보육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과 및 보육교사가 유아교육과 및 유치원정교사 자격에 맞추는 방식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며 자격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가 가진 강점을 살리면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들 간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가 함께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면, 서로의 전문성을 배우고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교사 간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더 나은 발달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예비 보육교사로서 저는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보육 분야가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에 대한 연구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며, 아동학과와 유아교육과,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의 균형 잡힌 협력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영유아는 차별 없이 더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은 전문성 강화와 협력의 기회를 통해 직업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 6

유보통합에 관한 질문들

김 지 예
기자(서울신문)

유보통합에 관한 질문들

김 지 예 서울신문 기자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통합을 이뤄내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앞서 유보통합은 여러 차례 시도됐다가 실패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도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유보통합을 추진했으나 결국 추진단을 해체했다.

십여 년간의 부침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 교육부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통합된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난관이 놓여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 단위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재원 분석과 이관 방안, 통합기관 설립 모델 기준 마련, 만0~5세 통합 교육과정 개발, 시범사업 등 모두 어려운 과제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 진행 중인 정책연구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진전이 있었지만 지난 6월 정부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 이후 세부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보통합을 위한 어떤 세부 연구가 시행 중이고 그 방향성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이었지만, 취재진의 관점에서는 세부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유보통합의 주요 뇌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다 보니, 실현 가능성과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궁금증에 대해 정부가 세부적으로 발표, 설명해주시면 정책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듯하다.

첫째, 재정확보 방안이다.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유보통합, AI 디지털교과서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관련 예산 규모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2]는 지난 8월 보고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르면 상당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소요 예산 추정이나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 국회 예산정책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2024. 08. 22

아울러 지난 10월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입장문에서 교육감들은 "유보통합 3법은 유보통합에 대한 국가수준 재정 확보와 이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없이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면에서 완전한 유보통합을 위해 적정한 재정확보 규모는 얼마인지, 보육 예산의 완전한 이관을 어떻게 이행할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재원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사 자격이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을 보면 통합교원 자격은 만0~5세 담당 영유아 정교사(1안) 또는 '0~2세'와 '3~5세' 담당 정교사를 구분하는 2안 가운데 택일하도록 했다. 시안에서 이 부분이 미정이라는 점은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에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유보통합 추진 시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사설 교육기관들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한다. 현장의 혼란과 집단 간 이견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 연구가 중요하다. 연구를 통해 어떤 자격 기준이 보육·교육적 관점에서 적절한지, 영유아 교원 역량 향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처우개선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등을 제안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통합 교원 양성을 위한 학사 학위 과정을 도입할 경우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1년 6개월 전 발표해야 수험생의 혼란이 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유아 사교육비 절감 방안이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0~5세 무상교육을 추진하기로 한 점은 학부모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유아교육비를 끌어올리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유아교육비 상승의 원인 중 하나는 사립유치원 원비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뿐 아니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이라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영어유치원은 유아교육 비전문 기관"이고 "조기 영어 교육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 기준 2018년 288개였던 '영어유치원'은 2023년 33개로 15.7% 늘어나기도 했다. 학원비 역시 고액으로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학원비는 약 131만원으로 집계되기도 했다.[3] 저출생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현실과 대조적이다. 현실을 고려하면 팽창하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4.9.24. https://noworry.kr/policyarchive/?idx=111995817&bmode=view

넷째, 국민 및 언론과의 소통이다. 유보통합은 교육 분야를 취재하는 취재진으로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주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유보통합 이후의 영유아 교육 보육의 구체적 그림이 잘 보이지 않아서다. 현재 운영 중인 시범학교를 비롯해 교육 당국과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신다면 정책 효과의 체감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지난달 취재를 위해 다녀온 전남의 한 유치원에서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언어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언어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놓친 다섯 명의 아이가 기초적인 우리말 발음부터 교사와 1대 1로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내년 예산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더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 유아의 학부모는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치료를 해 주는 기관도 없는 데다 유료로 하려면 큰 비용이 든다"며 "공교육에서 맡아주니 정말 고맙다"고 했다. 만 5세인 이 아이가 언어 발달이 지연된 채 초등학교에 진학했다면 학교 생활에서도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유보통합의 목적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상향 평준화와 함께 모든 아이를 소중하게 키우는 데에 있다.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지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연구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4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국회의원 안상훈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육아정책연구소
Tel. 02-398-7700 www.kicce.re.kr